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5. APR

전문가 기고

풍속이 달라졌다고 풍향이 바뀔까.
- 기후위기는 가짜뉴스라는 트럼프
주장의 속뜻

ESG 주요 현안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및
2035 NDC 수립동향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풍속이 달라졌다고 풍향이 바뀔까.

기후위기는
가짜뉴스라는
트럼프 주장의 속뜻

김경락
한겨레 기자

“폴리이코노미
시대에도
이념보다 실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대체로 현실 정치인은 진실보다는 프로파간다를 펼친다. 하지만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은 언제나 주목 대상이다. 힘 있는 정치인은 남이 이뤄낸 성과도 본인 것으로, 본인에게서 비롯된 부작용은 남의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유력 정치인의 말일 수록 외면해서도 안되고 그대로 믿어서도 안되는 까닭이다. 속 뜻을 읽어야 기회가 열린다. 현재는 ‘폴리이코노미’ 시대여서 더더욱 그렇다.

미 신정부를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의 입이 연일 쏟아내는 발언들은 종종 상호 충돌하거나 현실성이 없어 보여 당혹감에 빠뜨리곤 한다. 하지만 기존 질서와 통념을 깨뜨릴 힘이 있는 최강대국 대통령의 말이라 웃어넘길 수 없다. 에너지와 관련한 그의 말 또한 그렇다.

기후위기는 가짜뉴스라는 그의 말

트럼프는 언젠가 ‘기후위기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수십년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와 토론 끝에 우리네 삶이 이대로 가다간 생존 위기를 맞게 된다는 공감대가 탄탄하게 형성된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단박에 가짜라고 그는 몰아세웠다. 정치인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명제를 염두에 둔다면, 그의 말에 담긴 속뜻은 뭘까.

정부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다. 트럼프도 다르지 않다. 적어도 트럼프도 ‘임기’란 시간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많은 말을 했지만 가장 무게를 두는 정책 방향은 ‘제조업 부활’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전쟁’이나 바이든 정부 때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정의 궁극적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의 ‘중국 때리기’도 제조업 부활 방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트럼프의 기후 관련 정책도 제조업 부활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견줘 상대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이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수십년에 걸친 미국 제조업 위축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질서의 확산, 정치적으로는 진보 강화의 사조 속에 소외된 혹은 버려진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트럼프는 이들의 열패감과 분노에 기댄 정치를 한다.

극적인 제조업 일자리 실종 사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위축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매우 드라마틱하게 진행됐다. 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50년대만해도 미국 전체 일자리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약 30%였다(전쟁의 가장 큰 산업적 기반은 제조업!).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서서히 감소해 1980년대 초에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약 20%로 낮아졌다. 2010년께는 10% 선까지 붕괴됐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약 8%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추동력에 대한 여러 갈래의 설명이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법률과 같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부터 시작해 기술 발전에 따른 중저급 노동의 필요성 약화, 자유무역의 확산에 따른 비용 효율적 기업 경영의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된다. 여기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2001년 1월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생산망에 본격 편입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2000년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다는 점을 기억하자.

풍속이 달라졌다고 풍향이 바뀔까.

기후위기는
가짜뉴스라는
트럼프 주장의 속뜻

이런 긴 시계 속의 변화는 자유무역이 더 많은 성장과 부를 가져온다는 이념과 실증에 기반한 것이긴 하지만 해당 기간 국가 내, 국가 간 양극화 심화를 불러왔다. 세계화(자유무역 확산의 또다른 이름)에 대한 불만은 세계 곳곳에서 쌓여갔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멀리는 2008년 금융위기, 가깝게는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그 이후 전개된 중부 및 북유럽의 주류였던 사민주의 계열 정당의 퇴조와 극우 세력의 부상에는 공통적으로 자유주의적 질서에 내재한 모순과 그에 대한 불만, 자유주의 질서를 신봉한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져 왔다. 따지고 보면 제조업 부활은 트럼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바이든 정부도 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었지만 제조업 강화 정책을 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손에 들고 칩ساب을 입안했다는 점도 기억하자. 웨이퍼는 바이든 정부의 제조업 부활 전략의 상징물이었다.

폴리이코노미시대에도 이념이 아닌 실리가 지배

세계화의 모순이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역설을 낳은 이런 '지형'을 고려하면 기후위기에 대한 트럼프의 속뜻도 짐작할 수 있다. 질문을 이렇게 해보자.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후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뭘까. 아마도 긍정할 공산이 높으며 실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산업도 그에겐 '아메리칸 퍼스트'다. 해당 산업을 배격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도 미국이 주도해야한다는 게 그의 의도이고 그런 취지로 이른바 '기후 관세'가 추진된다. 기후대응 산업의 공급망 사슬을 재편해 그 중심에 미국이 서려는 의도다.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산업의 부품 강국은 중국이다. 아마도 친환경 에너지 제조업에 미국 선두주자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가짜뉴스라고 선언하지 않았을 공산이 높다. 그가 전기차 영역에 대해선 날 선 발언을 하지 않고 있으며,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를 신 정부 요직에 앉힌 점을 염두에 두자.

정권의 임기는 '2050 탄소중립'의 시계보다는 훨씬 짧다. 트럼프의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애착은 전산업에서 시작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긴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나 기업들이 풍속이 달라졌다고 방향을 바꾼다면 미래의 과실을 놓치기 십상이다. 친환경 산업 동향에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폴리이코노미 시대에도 이념보다 실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참고자료

〈"기후위기는 거짓" 주장 트럼프 재당선에 전세계 과학자들 우려〉(동아사이언스, 2024. 1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정책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데이비드 굿하트 지음, 김경락 번역, 2019)
OECD 경제통계정보시스템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및 2035 NDC 수립동향

“디지털 제품 여권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1. 배출권거래제도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기후회의를 필두로 시작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골간은 온실가스 감축, 즉 탄소중립(net zero 2050)의 실현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RE100과 교토의정서에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화를 위한 교토메커니즘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가 도입되었다.

이들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내 정책, 즉 K-RE100과 국내 배출권거래제도(K-ETS)가 실행되고 있다.

1)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한국거래소(KRX)에서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제는 1차(2015년), 2차(2018~2020년)를 거쳐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5차 계획기간(2031~2035년)이 예정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근거 법규이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배출권 거래제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 속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2024년 2월부터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고 배출권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할당 대상 업체,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만 제한되었던 시장 참여자가 투자 매매업자, 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가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및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2025년부터는 개인도 위탁 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될 방침이다.

2) 국내 배출권거래 주관부서

국내 배출권거래 주관부서는 환경부로서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탄소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 및 확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결정된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와 한국환경공단(KEC)의 할당계획에 따라 계획기간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할당업체를 고시하고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및 2035 NDC 수립동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 소속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 정보관리 기관이자 온실가스 감축 총괄 분석 및 평가기관으로 정보관리팀에서 배출권 할당 및 조정 및 취소 시스템을 운영하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에는 배출권 할당 업무를 담당하는 배출권정책지원부와 배출권할당부가 있다. 배출권정책지원부는 배출권 거래제 정책을 지원하며, 배출권할당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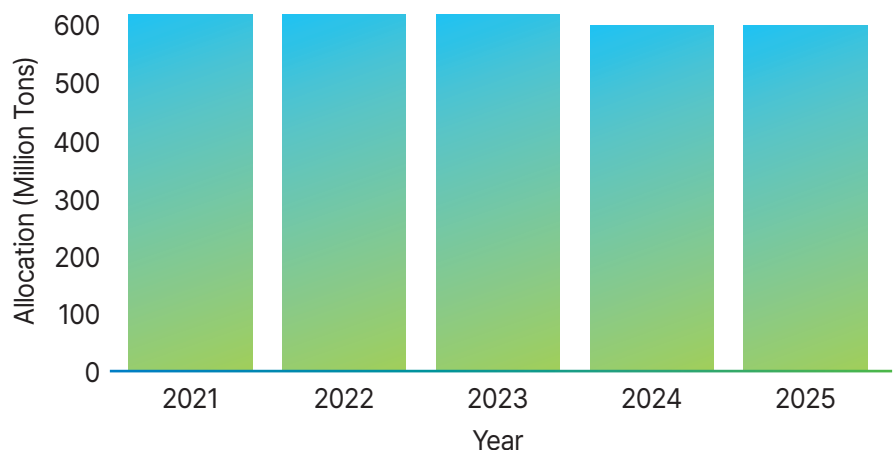
3) 배출권 할당 방식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배출량 기준 할당(GF: Grand fathering) 방식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BM: Benchmark)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로 배출량 기준 할당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보고한 배출량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당이 용이 하지만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과거에 배출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 받게 된다. 이 방식은 배출 원인자 책임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이 더 많은 할당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으며,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무상 할당량도 같이 감소하므로 감축 노력을 위한 동기가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둘째로 배출효율 기준 할당은 기준 연도 제품 생산량, 열 또는 연료 사용량과 같은 과거 활동 자료를 근거로 설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업종 평균 생산량 대비 배출량을 기준으로 활용하여 우발적인 이익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기준점보다 생산량 대비 배출량이 적은 기업, 즉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좋은 기업에게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 효율이 낮은 기업에게는 적은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할당 방식이다.

Annual Greenhouse Gas Emission Allocation in South Korea (2021-2025)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및 2035 NDC 수립동향

3기에는 총 29억 200만 톤의 배출권이 할당되었으며, 시장 안정화, 시장 형성, 신규 진입자 등을 위해 1억 8천만 톤이 예비 되었다. 2021년부터 K-ETS에 새롭게 포함되는 산업 부문이 추가되어 총 685개 회사가 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며, 이는 국가 배출량의 73.5%를 차지한다.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되거나 경매를 통해 할당된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하였다. 다만, 무역집약도와 비용 발생도를 곱한 값이 0.2% 미만인 28개 업종은 100% 무상으로 할당받고, 에너지 집약적이거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도 100% 무상 할당을 받았다.

4) 배출권 거래 시장의 현황

배출권 거래량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 566만 톤에서 2021년 5,472만 톤, 2023년 8월 기준 6,054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배출권 가격은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7월에는 톤당 7,02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배출권 과잉 할당 등이 원인으로 보이지만 낮은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약화시키고, 배출권 거래 시장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배출권 시장의 낮은 유동성과 높은 가격 변동성은 시장 참여 기업에게 가격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배출권 선물 시장을 도입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출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을 완화와 외부 탄소 감축 실적의 상쇄 배출권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더욱 완화에 나아갈 방침이다.

2. 2035 NDC 수립동향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어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이는 각 국가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5년마다 설정하는 목표이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NDC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 나아가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1) 국내 NDC

대한민국은 전 경제 분야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국제 사회의 책임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 상향된 NDC를 외교부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및 2035 NDC 수립동향

그 기본적인 내용은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 톤)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는 2030년 배출량을 436.6백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설정된 의미가 있다.

2) NDC 업무 주관부서

환경부는 NDC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는 주무 부서로서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감축량 산정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탄소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되 환경부의 지원을 받는다.

산자부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처는 각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 허용량을 설정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NDC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환경부가 2050년 순배출량 0톤을 목표로 매년 균등 감축을 전제로 산출된 감축 목표율을 기준으로 NDC 상향안을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3) 2035 NDC

각국은 2025년 2월 또는 2025년 11월 COP30까지 '2035 NDC'(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2035 NDC는 이전 목표치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문가 그룹에서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며, 탄소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주도로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하고,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며, 2025년 9월까지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3. 결론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 허용 총량 감축, 시장 규제 완화, 시장 감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배출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2035 NDC 수립 동향은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법적 기반 강화와 부문별 세부 로드맵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2035년 NDC 제출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장기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SG

공통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2025년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ESG경제 | 2025.03.25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6>

CJ푸드빌, ESG 경영 강화... 정보보호 최고 수준 'ISMS-P' 인증 취득

중앙이코노미뉴스 | 2025.03.10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303>

LS증권, ESG 경영 강화 위해 다각도 노력 기울여

메트로신문 | 2025.03.10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310500290>

SK증권, 승진자와 함께 'ESG 데이' 진행

이지경제 | 2025.03.10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148>

우아한형제들-IBK투자증권, ESG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미스트 | 2025.03.17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03170051>

해운 배출 첫 글로벌 탄소세 추진

매거진한경 | 2025.04.08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4086944b>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2025 ESG 친환경 패키지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로넷 | 2025.04.23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720>

'멸종위기' 구상나무 보호 특별 프로젝트...사단법인 '리본디어스' ESG 콘서트 개최

MBN | 2025.03.10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382898>

현대백화점그룹, 부산 '우리동네ESG센터' 조성에 2억원 지원

연합뉴스 | 2025.03.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122200030?input=1195m>

SGI서울보증, 임직원 작년 3428시간 봉사활동, 취약계층에 '온정' 나눠

조선일보 | 2025.03.05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5/03/05/5AEDAULFVAA5GGZK2WHQIOXKW4/

광명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위한 광명형 ESG 강화

대한경제 | 2025.03.21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3210818463000029>

서울경제진흥원-ESG 비즈니스 포럼 간담회 개최...ESG 협력 방안 모색

강사뉴스 | 2025.03.20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718>

부산시, '2025년 사회가치경영(ESG) 역량강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코리아헬스타임즈 | 2025.04.14 <https://www.koreahealth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80>

대한상의, ESG 경영 콘퍼런스 "리스크 대응력 키워 내실 다져야"

한국경제 | 2025.03.2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080611>

트럼프 '안티 ESG' 기조에 반발 확산

매거진한경 | 2025.04.17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4177015b>

"출생 축하금 1억원 통했다"... 부영의 ESG 경영

머니S | 2025.03.21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32010482559778>

ESG 공시 의무화 미루던 정부, 경제 불확실성 내세워 '신중론'

한겨레 | 2025.04.23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93871.html>

경기도,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미디어군포 | 2025.04.21 <https://mediagunpo.co.kr/19665>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 1월	2월	3월
녹색채권	283	291	292	300	303	301	296	290
사회적채권	1,609	1,618	1,659	1,689	1,696	1,701	1,713	1,718
지속가능채권	230	261	258	262	254	255	248	243

(단위: 천억 원)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 1월	2월	3월
녹색채권	264	269	268	274	273	273	263	260
사회적채권	2,121	2,113	2,153	2,165	2,172	2,162	2,130	2,120
지속가능채권	167	166	166	168	166	167	164	164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3.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204

(단위: 건)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3.3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530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5.3)* CF100 참여 기업 수:
167개 ('25.3)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	-	-	6	14	27	36	36	36
글로벌	141	204	269	335	393	426	439	445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